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임명 및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 등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5 년 8 월 20 일

청 원 인

성 명 : 정 강 자  21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공동대표)

전화번호 : 02-6912-5281

소 개 의 원 : 신 경 민 (인)

					의 장
주무관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성명 : 정강자 외 21인
건명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임명 및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 등 의견 청원
소개년월일	2015년 8월 20일
<p>소개의견</p> <p>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부터 이탈리아 소재 스파이웨어 업체 '해킹팀'社의 'RC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국인 휴대폰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특검 실시,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청원인의 청원이 있어 소개합니다.</p>	

소개의원

신경민

인

청원서

1. 제목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임명 및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 등 의견 청원

2. 취지 및 주요 내용

- 지난 2015년 7월 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처음 국내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 사용자를 대상으로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 만약 국정원이 법적인 절차와 한계를 위반하며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는 정보기관이 안보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중대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 최근까지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 ‘자살한 임모씨가 모든 책임자였다’는 등등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원의 입장 중 상당 부분은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정원의 설명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또는 강제수사권한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 또는 수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혀야만 합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40여일 동안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조사는 사실상 담보상태에 있습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받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되

려 국정원 파견을 갖 마치고 복귀한 검사를 담당검사로 지정하는 등 적정한 선에서 의혹을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려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 및 조사도 국가정보원의 비협조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것도 국회 차원의 조사작업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의한 해킹프로그램 사용과 불법사찰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 또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디거나 난관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틀이 부실하거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경우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상설 전임 위원회가 아닌 겸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의원보좌진의 조력은 물론 외부 정보전문가들의 지원조차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도 총액만 공개하고 있어 1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국민세금의 용처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국회 외에는 국정원을 감시할 그 어떤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국정원의 18대 대선불법개입 사건이 드러난 직후인 2013년말 국회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시도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실한 감독과 통제 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러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의 부실함이 이번 사태를 배태한 근본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청원인들은 첫째, 국회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둘째, 국정원이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2016년도 국정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정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셋째, 국정원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이번 해킹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길 것을 청원합니다.






넷째, 국정원이 독립적인 외부기관 또는 국회에 의해 실질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국정원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는 등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국정원이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합니다.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한택근 (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 회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 빌딩 5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이중희 (진보네트워크 센터 대표)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천 연동, 3층)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중희	
3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4	이호중 (천주교인권위 원회 상임이사)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2층		
5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0 풍민빌딩 2층		
6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 사건물 14층	최종진	
7	김하범 (민주주의국민행 동 운영위원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0-11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8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 연합 사무처장)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		
9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 회 상임대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 공간 나루 3층		
10	배진경 (한국여성노동 자회 공동대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번지 3 층		
11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인천시 부평구 부평3동 767-155		
12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59-20 관악맨션 103-402		
13	하준태 (KYC 한국청년연합 대표)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5 5층		
14	정진우 (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 관 711호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5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6-264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16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91-3 2층 다산인권센터		
17	김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인천 부평구 부평1동 529-169 3층 인권운동공간 '활'		
18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200 동아빌딩 4층		
19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20	권오양 (부정선거진상 규명시민모임 대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19-13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21	<p style="text-align: center;">이재승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회장)</p>	<p>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6번지 문래파라곤 201동 13층 1310호 민주 주의법학연구회</p>		
22	<p style="text-align: center;">송주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p>	<p>서울시 관악구 인현동 1632-2 2층</p>	